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011
----------	------

발의연월일 : 2024. 11. 28.

발 의 자 : 임오경 · 한민수 · 서영교
김남희 · 차지호 · 김윤덕
민병덕 · 위성곤 · 윤후덕
한정애 · 강선우 · 문정복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특별관리지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중 “지역”을 “지역(「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p>의 형질변경</p> <p>가. ~ 라. (생 략)</p> <p>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u>지역</u>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p> <p>1의2. ~ 9. (생 략)</p> <p>② ~ ⑪ (생 략)</p>	<p>-----</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p> <p>-----</p> <p>-----</p> <p>-----</p> <p>-----</p> <p>-----<u>지역</u>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p> <p>-----</p> <p>1의2. ~ 9. (현행과 같음)</p> <p>② ~ ⑪ (현행과 같음)</p>
--	---